

공정위, 개정 하도급법 행정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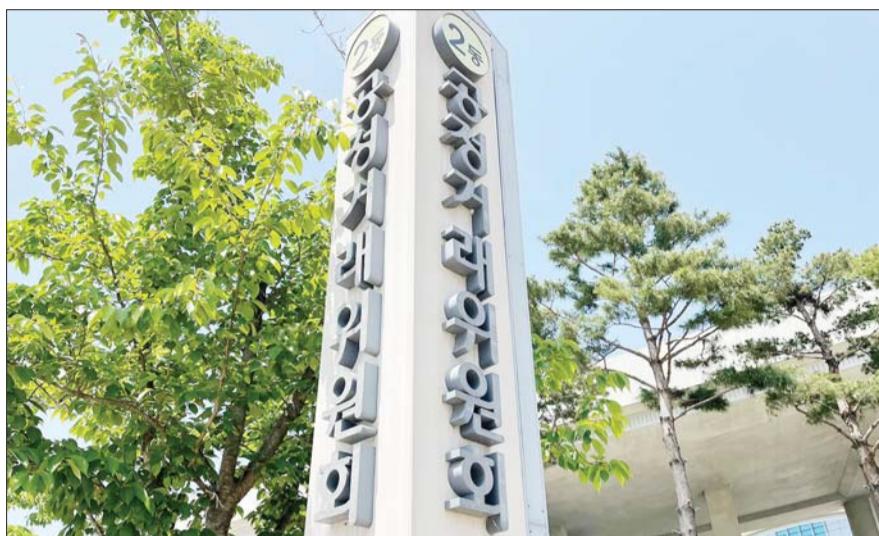
자산 5조 이상 대기업, 하도급 결제조건 공시 의무화 된다

공시의무 구체화·세부사항 지정
미공시 반복시 과태료 가중 조치
내년 1월 12일부터 시행 예정

대기업 계열회사는 내년부터 하도급 계약 체결시 대금 결제조건을 연간 2회 공시해야하고 미이행시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미공시가 반복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이 최대 20%까지 가중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에 관한 규정 및 하도급 대금 결제조건 공시의무 위반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제정안을 마련해 11월 14일부터 12월 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내년 1월 12일 시행되는 개정 하도급 법에 따르면, 내년부터 하도급거래를 하는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하도급업체들이 알 수 있도록 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해야 한다. 이번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메트로신문DB

행정규칙 제정안은 기업들이 이같은 공시 의무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공시의무를 구체화하고 과태료 부과기준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한 것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개정 하도급법에 따른 공시대상 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의

지급수단, 지급금액, 지급기간, 분쟁조정기구 등에 관한 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지급수단에 따라 현금(수표)과 상생결제, 어음대체결제수단(기업구매전용 카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구매

론), 어음 별로 만기에 따라 구분해 지급금액을 기재해야 한다. 또 수급사업자들이 한눈에 지급수단별 지급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현금과 현금성결제비율을 공시해야 한다.

지급기간은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대금지급일까지의 기간으로, '10일 이내', '10일 초과 15일 이하' 등 구간별로 지급금액을 공시해야 한다.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 설치 여부와 담당부서 및 연락처, 분쟁조정 절차, 분쟁 조정 예상 소요시간 등을 공시해야 하는데, 분쟁조정기구가 구매부서 등 계약담당 부서 내 설치된 경우는 분쟁조정기구로 보지 않는다.

공시 빈도와 시기는 시행령 개정안에서 정한대로 매년 2회 반기 말(6.30., 12.31.)로부터 45일 이내다.

공시는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이용해 기업집단 현황공시 등 기존의 다른 공시제도와 동일한 절차로

공시하면 된다.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에 규정된 과태료의 경우 기본금액에 대한 가중·감경 사유를 정했다. 법 위반이 반복되는 경우 과태료금액을 가중할 수 있도록 했는데, 최근 5년간 공시의무 위반건수가 4회 이상 ~ 6회 이하인 경우 10% 가중, 7회 이상인 경우 20%를 가중하도록 했다.

최초위반 또는 최근 5개년간 공시위반 행위가 없는 경우 20%를 감경하고,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신규 편입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위반한 경우엔 50% 감경한다. 또 공시지연 일수가 30일 이하인 경우 75%, 7일 이하는 50%, 15일 이하 30%, 30일 이하 20%를 감경토록 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기간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관련 절차를 거쳐 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산업부, 고준위 방폐물 종합 안내서 발간

80개 질문 답변 형식… 실증 정보 제공
이장관 “값싼 원전혜택, 결자해지해야”

고준위방사성폐기물(방폐물)의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선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준위 방폐물에 대한 종합 안내서인 ‘사용후핵연료, 필수적이고 귀중한 정보집(사필귀정)’을 발간했다.

13일 산업부에 따르면, 안내서는 80개의 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방식으로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원자력 발전과 고준위 방폐물에 대한 기본적이고 실증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과학·인문사회 전문가 5인의 감수를 통해 정확성을 검증했다.

안내서 1부(‘원자력은 안전한가요?’)는 원자력발전의 일반적인 현황과 고준위 방폐물 관리의 안전성에 대해 설명한다. 2부(‘고준위 방폐물은 어떻게 관리하나요?’)에서는 운반과 저장, 처분 등 고준위 방폐물 관리 각 분야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정부의 정책 방향에 관해 이야기한다. 3부(‘고준위 방폐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메트로신문DB

물 알쓸신잡)’에서는 그간 고준위 방폐물 관리와 관련해 빈번하게 질문돼 왔던 사항과 오해가 있던 사항들에 대해 답변하는 내용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발간 사에서 “정부는 원전 정책의 정상화와 재생에너지의 합리적인 보급 확대를 통해 현실적이고 조화로운 에너지믹스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고준위 방폐물의 안전한 관리를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은 1978년 고리 1호기 가동 이래 값싼 원전의 혜택을 누려온

우리 세대가 결자해지한다는 마음으로 첫걸음을 떼야할 시점”이라며 “안내서가 이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안내서와 함께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에 관한 소책자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 국민안전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도 같이 공개했다.

소책자는 특별법의 필요성과 주요 내용, 원전 지역주민들의 관심사항인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산업부는 소책자를 통해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은 원전의 사용후핵연료를 별도 부지로 반출해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법이 없으면 원전 부지에서 사용후핵연료를 빼내는 시기도 늦어지므로 지역의 부담이 커진다고 경고했다.

안내서와 특별법 소책자는 산업부나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누리집에서 누구든지 전문을 내려받아 열람할 수 있으며, 도서관과 국회, 지자체, 정부부처 등에 배포된다. /세종=한용수 기자

로와트시) 당 9.8원 인상이 결정됐고, 올해 4월과 10월에 4.9원씩 반영됐다.

올해도 연료비가 급등하면서 비용부담이 커졌다. LNG 가격은 올해 들어 9월까지 톤당 평균 132만56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평균인 61만6400원 대비 2배 넘게 인상됐다. 한전은 올해 4월과 7월, 10월 세 차례에 걸쳐 전기요금을 인상했으나 연료비 급등에 따라 전기를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역마진 구조가 지속되면서 적자 규모가 올해 연말까지 역대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한전의 올해 3분기까지 누적적자는 21조8342억원 규모로 이미 지난해 연간 적자의 3.7배 수준에 달했다. 난방 수요가 증가하는 겨울철에 접어들면서 4분기 적자 폭이 더 확대되고 누적 적자도 30조원을 넘을 가능성이 크다.

/세종=한용수 기자

산자부, ‘2022년 중견기업’ 주간 돌입

우수성공사례 공유·소통 행사 마련

중견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우수 성공사례 공유와 소통을 위한 다양한 행사가 한자리에서 펼쳐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18일까지 ‘2022년 중견기업 주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중견기업 주간은 중견기업 인식 제고와 업계 사기 진작을 위해 중견기업법에 따라 매년 11월 셋째주에 열리는 행사다.

올해는 ‘오픈 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 ‘디지털전환’, ‘성과화산’, ‘해외시

장 진출’ 등을 주제로 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15일 열리는 ‘한-독 중견기업 기술 협력 파트너링’에서는 지난 2020년 6월 독일 아헨특구에 설치된 한-독 기술협력센터 입주기업 등을 대상으로 그간 우수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기술협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16일에는 ‘중견기업 디지털 전환 협력’ 행사를 개최, ‘디지털 대전환 시대, 중견기업 대응전략’에 대한 장영재 KAIST 교수 특강에 이어 디지털전환 관련 우수 혁신사례 등이 발표된다.

17일 ‘중견기업 혁신 컨퍼런스’에서는 신사업 진출, 해외시장 개척 등의 성과를 창출한 ‘등대(Lighthouse) 기업’ 10개사에 선정패를 수여하고 기업별 성공사례를 발표한다. 아울러 ‘세계경제 불확실성에 대한 중견기업의 대응’을 주제로 강인수 숙명여대 교수와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실장의 강연과 패널 토론이 이어진다.

18일에는 해외 M&A를 활용한 선제적 사업재편과 신시장·신사업 진출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중견기업 신사업 전환 포럼’이 열리고 ‘M&A를 활용한 신사업 전환 세미나’, ‘해외 M&A 1대 1 상담회’ 등이 진행된다.

산업인력공단 작년 응시 6.5만명 달해
수업자 절반이상 기업서 관련 자격 우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소방의 날’(11월 9일)을 맞아 소방 관련 국가기술자격 응시자를 분석한 결과 1년 새 3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은 지난 2017~2021년 5년간 소방 분야 국가기술자격 7종목을 분석한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이 가운데 지난해 7종목의 응시 인원은 총 6만4673명, 전년(4만9910명) 대비 1만4763명으로 29.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시 인원은 필기 시험에 접수한 11만4207명 중 결제취소(2만3664명)와 시험 미응시(2만5870명)를 제외해 접계했다.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종목은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화재감식평가기사 ▲화재감식평가산업기사 등 7개다.

응시율을 종목별로 보면 각각 전년 대비 20% 이상 늘었다. 이 중 화재감식평가기사와 화재감식평가산업기사는 전년 대비 응시 인원이 2배 넘게 증가했다.

응시생 대부분은 30~40대였고, 10명 중 6명은 직장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수험자의 절반이상은 기업에서 소방 관련 자격을 우대한다고 답했다. 소방 관련 자격증이 자격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는 답도 65.8%를 차지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